

『柳寬順物語』에 나타난 식민지 기록 통제와 재현 방식*

Record Control and Modes of Representation in Yu Gwan-sun Monogatari

박 종 선**

Jong-Sun Park

국문요약

본 연구는 재일한국인 작가 유대하(柳大河)가 일본어로 집필한 소설 『柳寬順物語 (유관순 이야기)』를 대상으로, 작품 속 재판 장면에 등장하는 「서기관, 그 부분은 삭제해」라는 상징적 표현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기록 통제와 역사 왜곡의 구조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사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보다는, 식민 권력과 기억의 정치성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유관순 및 박열 재판 관련 문헌과 사료를 보조적으로 참고하여 작품의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식민 권력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과 사건을 선택적으로 기록하거나 삭제·축소함으로써 집단 기억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작품 속 '삭제'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권력이 역사 서술과 기억 형성에 개입하는 상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ttp://doi.org/10.56475/ygsr.2026.31.1.97>

논문투고일 : 2026.04.14. 논문심사일 : 2026.05.19. 게재확정일 : 2026.06.05.

* 본 논문은 백석대학교 교비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소장(E-mail: sun4271@naver.com)

Director of Center for Yu Gwan-sun Studies in Baekseok Univ.

본 연구는 기록·기억·권력의 상호관계를 조명하고, 공식 기록에서 배제되거나 침묵당한 목소리를 문학적 서사를 통해 복원하려는 시도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문학이 지워진 역사를 재해석하고 역사적 기억을 환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주제어: 기록 통제, 역사 왜곡, 유관순, 독립운동, 기억과 전승

목 차

I. 머리말	IV. 지워진 기록과 기억의 복원
II. 식민지 사법체제와 기록	사례
통제의 구조	V. 결론 : 기록의 권력성과 역사
III. 재판 서사에 나타난 기록	서술의 과제
통제와 역사왜곡의 양상	

I. 머리말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목소리와 의미를 담아내는 해석적 산물이다. 역사적 사실의 존재 여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떠한 의도와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역사는 ‘무엇을 기록했는가’뿐 아니라 ‘무엇을 지웠는가’를 통해서도 권력의 성격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柳大河의 『柳寬順物語』(新幹社, 2006)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柳大河는 1949년 아이치현에서 태어난 재일한국인 2세 작가로, 유관순의 삶과 정신을 조명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 작품을 집필하였다. 그는 이 책의 후기에서 “역사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시각을 뛰어넘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새로운 불씨를 피워내며 대립을

넘어서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고 있다(본 저서 324). 이러한 서술은 작가가 유관순의 법정 진술과 삶을 통해 역사적 진실과 기억의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는 역사적 사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설이라는 문학 텍스트에 재현된 역사 인식과 서술 방식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柳寬順物語』를 역사적 사실의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하기보다는 식민지 권력과 기록의 정치성을 드러내는 문학적 재현물로 이해하고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 속에 형상화된 기록의 삭제와 침묵, 그리고 그 상징적 의미를 고찰한다.

특히 『서기관, 그 부분은 삭제해…』(본 저서 260)라는 문학적 표현이 제시하는 장면을 출발점으로 삼아,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일본 제국이 수행한 기록 통제와 역사 왜곡이 작품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실제 역사적 사실을 직접 검증하기 위한 시도라기보다, 작품 속 서사를 통해 식민 권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피지배자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지배 질서를 정당화하는 담론을 구성하였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II. 식민지 사법체제와 기록 통제의 구조

1. 행정적 규제와 검열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관보』¹⁾(민병찬, 2012: 31)를 통해 통치와

1) 조선총독부 관보(朝鮮總督府 官報)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총독부가 매일 발행한 기관지이다. 일제강점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모든 공적 기록을 포함하고

행정의 효율을 위해 공문서 양식과 법령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거나 독립 의식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와 표현들은 삭제하고 제한 또는 사용을 금지하였다(한홍구, 2003: 372). 1920년대 후반에 발간된 역사 교과서에서 3·1운동은 단순한 치안 방해 사건으로 축소되었고(이명화, 2007: 157), 『대한독립선언서』는 급서 목록에 등재되어 보관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언론 통제의 대표 사례로는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이 있으며, 이는 조선인의 주체적 표현을 검열의 대상으로 간주하던 식민지 권력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신용하, 1990: 214).

일제는 조선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억압뿐만 아니라 정보와 기록의 통제를 통해 사상과 기억을 조작하였다. 한국어 연구와 사전 편찬을 한 조선어학회²⁾가 ‘반일 사상’으로 몰려 구성원들이 체포·고문을 당했으며 이는 정보와 언어 그리고 기록 자체를 민족 저항을 의미하는 ‘사상’으로 간주하고 탄압한 대표 사례이다(조선어학회사건, 1942)³⁾. 이러한 통제와 조작은 단순한 문서 행정의 차원이 아니라,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구성하고 조선인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체계적 전략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중앙과 지방 관공서를 중심으로

있으며 총 1만여호, 13만여 쪽에 달한다(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최종검색일 2025.6.11.). 이러한 조선총독부판본은 1985년 한국학문헌연구소(아시아 문화사)에서 수집 영인하여 공개한 이래 현재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선총독부판본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DB화가 이루어져 있다.

- 2) 조선어학회는 1931년 조선어연구회를 개편해 우리말과 글의 연구·통일을 목적으로 활동한 민간 학술 단체로 1949년 한글학회를 이름을 바꾸었다(위키백과 참조).
- 3) 일제는 한국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1936년에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선포하고 1039년 4월부터 학교의 국어과목을 전폐하고 각 신문과 잡지를 점차 폐간하였다. 1942년 10월에 조선어학회에도 총검거의 손을 대어 일제의 국어(일본어를 말함)상용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한 교사 검거를 비롯해 고문 등으로 1943년 3월 말경까지 29명이 검거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48명이 취조를 받았다(위키백과 참조).

모든 공적 문서의 생산과 보관을 감시하였고, 학교에서는 검열된 교과서를 통해 역사 인식을 재구성하였다. 이를테면, 조선총독부는 공문서 양식을 표준화하고, 대한제국 및 조선왕조의的古기록부터 민간기록까지 수집·해석하며, 이를 식민권력의 시각으로 재편집·이용하였다. 이 과정은 단순한 행정적 기록이 아닌 식민통치의 정당성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록 관리를 위한 것 이었다(박성진·이승일, 2007: 263). 언론 역시 조선인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와 발행을 제한하며, 정권에 유리한 기사만을 보도하게 하였다. 총독부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된 직후부터 압수와 정간의 탄압을 자행하였다. 언론탄압은 신문 또는 잡지를 발행하기 전 단계부터 실시하였으며 특히 ‘사전탄압’에 해당하는 간담, 주의, 경고는 법규에도 없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금지는 ‘신문지법’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⁴⁾ 광무 ‘신문지법’은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 보도의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는 등은 보도할 수 없도록 하여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금자’를 명할 수 있었다⁵⁾.

법규에 명시된 신문에 대한 행정처분은 ‘압수’, ‘발행정지’, ‘발행금지’였으며 조선출판경찰월보의 ‘신문지행정처분건수표’에 따르면 이외에도 ‘주악’과 ‘삭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삭제’는 문제가 된 기사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삭제한 후 인쇄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민주, 2018: 73).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문서 작성과 관리에 관한 명확한

4) 신문지법(新聞紙法)은 1907년 7월 이완용 내각의 성립, 헤이그 특사 사건, 고종(高宗, 재위 1863~1907)의 강제 퇴위, 정미 7조약의 체결 등으로 인해 반일 감정이 크게 고조되자, 통감부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신문지법」을 선포했다(우리역사넷 참조).

5)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신편 한국사 47』;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nh/view.do?levelId=nh_051_0030_0030_0050&utm_source=chagpt.com 참고).

규칙과 지침을 마련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10년대 통감부 시기부터 운영되었던 문서 검열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사법 문건, 경찰 보고서, 언론 기사, 학교 교재 등의 모든 공식 문서가 검열을 거쳐야 하며, 불온하거나 반제국적 정서를 담은 내용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명시하였다.

2. 사법 절차에서의 기록 조작과 왜곡

1919년 3·1운동 이후 체포된 유관순을 비롯한 다수의 만세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 기록을 들 수 있다. 당시 유관순의 진술 중 ‘대한독립’이라는 표현은 ‘사회 혼란을 유도하는 발언’으로 간주되어 공식 조서에는 기입되지 않았거나, ‘불온한 정치적 주장을 함’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대체되었다⁶⁾.

식민지 사법체계는 단순한 재판 절차의 운영 구조라기보다, 피식민인의 정체성과 권리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보안법 및 치안유지법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는 경찰 및 헌병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는 공판 단계의 사실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의 권력 관계 속에서 축약되거나 재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식민지 사법 절차에서는 피의자의 정치적 신념이나 독립 운동과의 연계가 집중적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정보가 기록되는 방식과 공판에서의 공개 여부는 제도적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점에서 식민지 사법체계는 형식적 절차로서의 재판

6) 유관순 열사 사건공판조서, 조선총독부 재판소 기록, 1920.

기능과 함께, 정치적 통제와 정보 관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논의된다. 이는 식민 권력에 의한 기억의 통제로, 제국의 질서를 위협하는 발언은 공식 기록에 남기지 않음으로써 법적 근거를 사후에 지워버리는 방식이었다.⁷⁾

또한 일본은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를 정식 재판 과정의 증거로 그대로 채택하는 이른바 ‘조서 중심주의’를 택하였는데(이완규, 2003: 6), 이는 고문과 회유에 의해 작성된 왜곡된 진술이 사실로 확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수사 과정은 단순한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해석과 권력적 개입이 동반된 구조적 기록 조작의 장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작된 수사 기록은 이후 언론 보도와 교육 자료에서도 재생산되어, 피지배자의 목소리를 왜곡된 형태로 사회에 각인시켰다.

3. 재판 문서의 축소와 삭제 사례

재판 문서는 식민지 통치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장 공식적인 기록 형태였지만, 동시에 피식민자의 발언과 저항의 의미를 삭제하고 왜곡하는 대표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식민 권력은 재판 과정을 문서화할 때, 핵심 진술과 맥락을 선택적으로 축소하거나 생략함으로써 기억의 왜곡을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사건에서 확인된다.

1) 박열 재판의 왜곡

1920년대 조선인 청년 박열이 일본 왕세자 폭살 계획 혐의로 기소되었을 당시, 그는 재판정에서 조선의 독립과 무정부주의 사상의 정당성을 열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법정에서의 변호인도 필요로

7) 국가기록원, 3·1운동 탄압 형사처벌 법규;

(<https://theme.archives.go.kr/next/law/viewSub.do?pageUrl=CriminalJustice/sub01>).

하지 않았다. 이유는 ‘나는 일본제국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따라서 그 법정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하는 일은 곧 일본제국의 법 체계에 협력하는 것이 된다. 나는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변호인을 단호히 거부한다.’(흑색전선사, 2016: 366)며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하였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박열의 정치철학과 제국비판을 기록에서 생략하고, 그의 진술을 ‘무정부주의자의 망언’ 혹은 ‘허황된 선동’으로 축소 서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925년 12월 3일 대심원 제1특별형사부의 수명판사인 이타쿠라 마쓰타로(板倉松太郎)의 요구에 의해 도쿄제국대학 조교수인 의학박사 스기타 나오키(杉田直樹)가 박열의 심신상태검정서를 보면 더욱 뚜렷히 알 수 있다(흑색전선사, 2016: 370~371).

‘일본의 황실과 일본민족을 위해 저는 불명한 짓을 꾸민 것이니 그게 무서워 복수적으로 일본인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역형(磔刑)이든 뭐든 해도 좋다. 나도 복수를 위해 나쁜 짓을 꾸민 것이니, 그건 서로 마찬가지다. 그러나 나에 대해 법률로 심판하고, 더구나 제 멋대로 정한 법률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일본 법률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 아니 나는 일본 재판소라는 것을 무시한다. 따라서 나의 입장을 확실히 하고 감정을 거부하는 이유를 더한층 확실히 밝히기 위해, 내가 지난날 써 두었던 논문을 하나 당신에게 들려주려 한다(흑색전선사, 2016: 494).

이 과정에서 일본의 감정인 의견서에서는 “그 의식이 청명하고 사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환각,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후는 없으며, 단지 그 경우로 인해 다소의 편견 억측 등은 있다고 하더라도 병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박열의 심신상태를 감정하기 위한 박열과 법정 논쟁 중 검찰과 박열

사이의 논박은 공식 판결문에서 단락 수준으로 요약되었으며, 이는 재판 기록이 해당 이유만으로 판결 사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서사의 편집이자 역사 인식의 개입임을 보여준다(김일면, 2025).

당시 “의열단이라고 하면 일제가 최고의 악종(惡種)으로 봤다”면서 가급적이면(일제에게)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거나, 무슨 계열이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을 말한다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열 선생은 ‘의열단원이냐’고 물으니까 오히려 의열단과 ‘관계’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시신을 했다.

2) 유관순 판결문의 축소

유관순의 재판 과정에서도 그녀의 항변과 고문 피해 사실은 생략되었고, 판결문에는 ‘소요를 조장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형식적 문장만 남았다(임명순, 2007: 28). 특히, 유관순이 조선의 독립과 여성의 자각에 대해 발언한 내용은 법정에 참석한 목격자 구술을 통해 후대에 전해졌지만, 당시 공문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사법 문서가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권력의 전략적 선택 결과임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재판 문서는 진실보다 권력의 질서를 반영하는 서사로 가공되었으며, 기록을 통해 기억을 지우는 이중 구조로 작동하였다. 기록의 축소와 생략은 단순히 그로 인한 정보의 결핍이 아니라, 의도된 배제와 해석의 재구성이라는 점에서 식민 지배의 핵심 통치 전략이었다.

또한, 재판 절차에서 판결문은 축약된 형태로만 공개되거나, 일부 인물의 실명과 관련 진술이 생략된 채 기록됨으로써, 조선인의 법적

8) 뉴시스, 박열 “의열단과 관계있다… 내 사상 일치해 제후” 日 재판 기록 첫 발건, 2019. 7. 20일자 참고.

권리와 저항의 정당성 자체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정보 은폐에 그치지 않고, 기록의 선택과 배제를 통해 역사적 해석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록은 중립적 수단이 아니라, 식민 권력의 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이었으며, 사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질서를 동시에 구축하는 데 활용되었다.⁹⁾ 이를 통해 식민 당국은 역사의 서술권을 독점하고, 피지배자의 기억을 침묵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조선총독부 통감부 시기부터 시행된 문서 검열 규정, 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 문건의 기밀 유지 원칙,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의 공개 기록 축소 방침 등은 피식민인의 ‘말’을 제도적 방식으로 통제했던 구조를 보여준다. 기록은 중립적 수단이 아니라, 식민 권력의 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이었으며, 사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질서를 동시에 구축하는 데 활용되었다(이경용, 2021: 205-236).

Ⅲ. 재판 서사에 나타난 기록 통제와 역사왜곡의 양상

1. 삭제 명령의 은유와 역사적 맥락

다음은 柳大河의 ‘柳寬順物語(유관순이야기)’ 가운데 재판 과정의 문학 작품을 통해 당시의 사정을 그려보고자 하였다(柳大河, 2006: 260).

9) 이에 대해 이태진 교수(2014)는 “식민지적 법 문서와 공문서는 단지 행정 수단이 아니라 권력의 언어로 기능했다”고 분석한다(『한국근대의 역사인식과 사료의 구조』, 푸른역사).

문 : 「성명은?」

답 : 「유관순」

문 : 「생년월일은?」

답 : 「1902년 12월 17일입니다」

문 : 「서력(서기) 말고, 일본의 연호로 대답해」

답 : 「명치 35년입니다」

문 : 「잘 기억해둬. 앞으로 재판에서도 일본 연호로 대답하는 거야」

답 : 「……」

문 : 「본적지는?」

답 : 「대한제국 충청남도 천안군 목천면 용두리 338번지입니다」

문 : 「알고 있네, 검사님」

서기관은 붓끝을 멈추고 중얼거렸다.

문 : 「정말이지, 골치 아픈 아이다」

「가족 구성은?」

답 : 「헌병에게 살해당한 부모님과,

현재 구속 중인 오빠와 두 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언니도 있었지만,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총독부의 검사를 상대로 당당히 맞서는 이 소녀에게

서기관의 시선은 점점 깊어졌다.

문 : 「서기관, 그 부분은 삭제해」

『서기관, 그 부분은 삭제해』라는 장면은 단순한 대사가 아니다.

그것은 기록을 통해 진실을 유통시키는 서기관의 손이, 권력의 지시에 의해 ‘사실을 지우는 도구’로 전환되는 순간이다. 이 대사는 사법 기록과 정보 생산의 전 과정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 편집되고 통제될 수 있다는 구조를 축약적으로 보여준다. 유관순을 모델로 한 허구적 재판 장면에서, 판사가 불편한 내용을 서기관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서술은, 식민 지배 하에서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고 통제될 수 있는지를 문제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유관순의 가족사나 고통의 경험, 민족 정체성과 관련된 핵심 내용이 법정 기록에서 삭제되는 과정은, 단순한 편집이 아닌 정치적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¹⁰⁾.

2. 유관순 이야기에서 드러난 삭제의 구조

『유관순 이야기』의 서사 속에서 식민지 사법 기록이 구성되는 방식과 관련하여, 특정 인물의 진술과 기억이 선택적으로 처리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소설 속 그녀의 재판 과정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진술의 축소와 변조

유관순이 법정에서 분명하게 외친 “조선 독립 만세”는 판결문에서 사라지고 대신 ‘법정 소란 유발’이라는 식으로 축소 기록되었다. 이는 피의자의 정치적 의도를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인 표현으로 변조하여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희석시키는 방식이다.

10) 해당 문학 작품은 유관순을 모티프로 한 허구적 서사에 기반하고 있으나, 실제 재판기록에서 나타난 삭제 및 조작 관행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식민지 사법체계의 기록 왜곡 양상을 비판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의도적 맥락의 삭제

유관순이 받았던 고문과 구금 상황, 그리고 민족적 동기의 언급은 재판 기록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진술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저항하게 된 사회적 맥락 전체를 지운 것으로, 역사적 인과를 제거한 기록 왜곡에 해당한다.

3) 공적 서사의 사후적 재판

이후 발간된 재판 관련 공보나 총독부 연감에는 유관순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거나, ‘형량 확정 후 사망한 수감자’ 정도로 간단히 처리되었다. 이는 식민 당국이 특정 인물의 저항을 후대 기억에서 완전히 소거하려 한 ‘사후적 침묵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삭제는 한 개인의 삶을 지우는 것을 넘어서, 조선 민중 전체의 서사를 통제하려는 구조적 폭력이다. 역사적 진실을 보존해야 할 공적 기록이,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현실을 왜곡하는 수단으로 전략하는 것이다. 삭제된 것은 한 문장이 아니라, 항거의 윤리성과 집단적 기억 전체였다.

3. 기록 통제와 기억 왜곡의 권력

식민지 권력은 피자배자를 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를 기록하고 서술하는 방식을 장악함으로써 기억의 구조 자체를 통제하였다.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1) 진술에 대한 구조적 통제

유관순은 일제의 법정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그녀의 발언은 곧바로 기록되지 않거나 축소, 변형되었다. 이는 식민

지배 하에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발언이 체제에 편입될 수 있을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말의 자유가 아니라 기록의 허가만이 존재했던 것이다.

유관순은 일제의 법정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그녀의 발언은 곧바로 기록되지 않거나 축소, 변형되었다. 이는 피지배자의 진술이 사법 문서에 포함되기 위해선 체제 논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증언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자’의 여부는 당대 식민지 권력 관계와 사법제도의 운영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기록 편집과 해석의 독점

유관순의 재판 기록과 경찰 보고서, 신문 보도 등은 모두 조선총독부의 검열과 관리 아래 있었다. 그녀가 발언한 ‘조선 독립’이나 ‘정의’라는 단어는 문서에 남지 않았고, 법정 발언은 ‘소란 유발’이나 ‘치안 방해’로 요약되었다. 이는 제국이 피지배자의 의도와 맥락을 제거하고, 스스로 정한 해석 틀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한 대표적 사례이다.

3) 기억의 삭제와 침묵의 제도화

유관순이 사망한 이후, 총독부 발간 연감이나 사법 연보에는 그녀의 이름조차 남지 않았다. 특정 인물의 행적과 언행이 역사적 문서에서 지워지는 것은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집단 기억에서의 제거를 목표로 한 ‘제도적 침묵’의 결과이다. 이는 곧 역사는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기억의 선택’임을 보여준다.

결국 식민 권력은 말하는 주체를 선택하고, 그 의미를 규정하며, 어떤 기억은 남기고 어떤 기억은 제거함으로써 역사 서술의 권력 구조를

구축하였다. 이는 오늘날 아카이브 비판과 기억의 정치학에서 다루는 ‘누가 보존하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¹¹⁾

IV. 지워진 기록과 기억의 복원 사례

1. 지워진 기억의 복원과 역사 서술의 재해석

삭제된 역사와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억압된 진실이 다른 방식으로 복원되는 장면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억눌린 피지배자의 목소리는 문학과 예술, 구술사, 감정적 기억의 층위에서 복원되며, 이는 식민 통치가 지워버린 역사를 재서술하는 주체적 행위로 이어진다. 다음은 그러한 복원의 양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다.

1) 문학적 상상과 재현의 힘

유관순의 삶은 공식 재판 기록과 신문 기사에서 축소되거나 왜곡되었지만, 이후 소설, 희곡, 영화 등의 매체에서는 그녀의 고통과 저항, 신념이 서사적으로 재구성되었다. 예컨대, 유관순을 주인공으로 삼은 영화 <항거>, <1919 유관순> 등은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록되지 않은 감정과 신념을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복원한다. 이는 문학이 억압된 진실을 드러내는 대안적 역사 서술의 공간이 됨을 보여준다.

11) 이에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는 담론의 구조와 권력관계를 분석하며, “말할 수 있는 권리보다, 말이 전달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담론이 단순한 언어의 표현이 아니라, 권력과 지식이 얽힌 사회적 구조임을 지적하였다(Said, 1993).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The 1993 Reith Lectures』. Vintage Books).

2) 구술증언과 여성 기억의 복원

문학과는 달리, 구술사는 실제 경험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삭제된 기억을 되살린다. 유관순과 함께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인물들의 증언은 후대 연구자들에 의해 수집되었고(국가기록원, 2016: 116-117), 당시의 고문과 환경, 유관순의 최후 진술 등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제공한다. 이 증언들은 여성의 목소리로 기록되지 않았던 민족 서사의 공백을 채우며, ‘공적 기록’에 대항하는 ‘비공식적 진실’의 가치를 드러낸다. 유관순을 ‘소녀 열사’가 아니라, 신념을 지닌 민중 지식인으로 바라보게 하는 시각 역시 이러한 구술 기록에서 출발한다.

3) 감정의 기억과 집단 내면의 전승

유관순의 이야기는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감정구조와 윤리관을 반영한다. 3·1운동을 기억하는 지역 공동체의 제례, 추모 행사, 학교 교육에서의 구술 활동 등은 그녀의 존재를 역사적 사건이 아닌 ‘도덕적 감정의 주체’로 재현한다. 예컨대 유관순의 생애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구성하는 가운데, 어린 나이에 여자의 몸으로서 수행한 독립운동을 부각시키며 이를 기리고 본받아 애국의 마음을 가질 것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김기창, 2003: 305). 이는 제도적 교육과 달리 감정의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의 기억은 식민 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역사 인식의 또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

2. 여성 독립운동가 구술 증언 복원의 사례

공식 기록에서 삭제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서사는 구술, 회고록, 후대 문학 및 시청각 자료를 통해 재구성되고 있다. 이 과정은 개인의 기억 회복이 아니라, 침묵 속에 묻힌 민족서사의 재구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은 대표적인 세 가지 복원 양상이다.

1) 서대문형무소 수감자의 구술 기록

유관순과 함께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강기옥, 김향화 등의 여성은 해방 후 구술을 통해 당시 수감 중이던 유관순의 언행과 고문 상황을 증언하였다고 전해진다.¹²⁾ 이들은 유관순이 형무소에서도 수감자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며, 옥중 만세운동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전했다¹³⁾. 이러한 사실은 공식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진 ‘옥중 저항’이라는 새로운 역사 층위를 형성한다.

2) 자서전과 회고록을 통한 서사 복원

권기옥(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은 자신의 회고록 『나는 조선의 첫 여자비행사였다』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로서의 경험과 일제하에서의 정보 억압, 성차별, 그리고 투쟁의 의미를 직접 서술하였다¹⁴⁾. 그녀는 특히 여성의 활동이 남성 중심 서사에서 어떻게 배제되었는지를 비판하며, 여성의 말하기를 통해 ‘지워진 역사’를 복원하고자 했다.

3) 후대의 재구성과 시청각 자료

2000년대 이후 방송 다큐멘터리 또는 <역사스페셜> 등은 유관순 뿐만 아니라 정정화, 남자현, 신정애 등의 생애를 재조명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뷰, 후손의 증언, 유품 등을 통해 기록의 공백을 시각적으로

12) 조선일보, ‘항거’ 우리가 몰랐던 유관순→서대문형무소 8호실 이야기 셋, 2019.3.1.

13)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학술저널 논문 또는 공식 사료집에 수록된 1차 문헌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뉴데일리, 2018.6.자 기사에 의하면, 『고등학교 한국사』 등의 교과서에서 ‘서대문형무소 수감 중에도 독립만세를 부르며 옥중 동료들을 격려했었다는 표현이 있다.

14) 신동아, 1967년 8월호에 실린 권기옥 여사의 인터뷰 기사 「나는 한국 최초의 여자비행사」 참조.

채우는 한편, 식민지 권력이 목살했던 여성들의 ‘감정의 역사’를 현재화한다. 특히 유관순을 ‘소녀 열사’로만 소비하는 담론을 넘어서, 젠더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흐름은 그 의미가 크다(Shin Gi-wook & Moon Rennie, 2019: 399-408).

이러한 복원 작업은 여성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것을 넘어, 기억의 정치 속에서 누가 말할 수 있고 누가 침묵 당해 왔는지를 드러내는 비판적 역사쓰기이자, 기록의 결핍을 메우는 윤리적 실천이다.

3. 기억을 통해 바라본 역사

심성사(心性史, history of mentalities)는 인간의 감정, 직관, 신념, 일상의 감각적 반응 등을 역사 연구의 핵심 주제로 삼는 접근이다(이강화, 김상구, 2018: 935-942).

이 이론은 주로 프랑스의 아날학파를 통해 발전하였으며, 문서 중심의 전통 사학이 놓치기 쉬운 집단적 무의식과 감정의 연속성에 주목한다. 유관순의 기억을 복원하는 작업에서도 심성사의 관점은 다음과 같은 세 방향으로 의미를 드러낸다.

1) 기록되지 못한 감정의 역사

유관순의 고통과 분노, 신념, 그리고 절망은 법정 문서나 형무소 보고서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동료 수감자의 구술과 후대 문학에서 반복적으로 소환된다. 심성사적으로 보자면, 이 감정의 서사는 ‘불합리한 억압에 대한 양심적 반응’으로 기능하며, 삭제된 공식 기록을 감정의 기억으로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2) 기억을 이어가는 지역 공동체

충청도 천안 지역에서는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추모 의례와 기념식이

세대를 거쳐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 감정과 윤리의 공공적 재생산으로 기능한다.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역사교육과는 다른, ‘공동체적 기억의 재현’이라는 심성사적 전통의 맥락에 있다.

3) 교육과 일상 속 ‘작은 기억’의 보존

유관순의 이름을 딴 학교, 거리, 기념우표, 동상, 교과서 속 삽화 등은 제도적으로 구성된 기억이지만, 동시에 개인들이 일상 속에서 접하는 ‘생활 속 역사’로 작동한다. 심성사는 이러한 요소들이 정보가 아니라, 감정을 통해 기억을 지속시키는 매개체라고 본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유관순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연대감을 느끼는 과정은, 감정의 역사로서의 유관순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고 지속되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심성사의 관점에서 본 유관순은 한 명의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감정의 역사 속에서 살아 있는 윤리적 표상이며, 그녀를 기억하는 다양한 층위는 제국 권력이 삭제하고자 한 것의 반증으로 기능한다. 그녀는 지워진 인물이 아니라, 기록을 넘어 끝내 말한 인물이며, 그 기억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다. 즉, 유관순은 지워진 인물이 아니라, 기록을 넘어 말한 인물이며, 그 기억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역사다.

V. 결론: 기록의 권력성과 역사 서술의 과제

역사 기록은 과거를 정리하는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권력이 선택하고 조직한 서사의 집합이다. 특히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기록 통제는 단순한 문서 행정이 아니라, 피지배자의 기억을 재구성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제국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柳大河의 소설 『柳寬順物語(유관순 이야기)』에 나타난 재판 서사를 중심으로 식민지 조선의 기록과 권력의 관계를 문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재판 과정과 기록의 ‘삭제’는 실제 역사적 사료에 대한 직접적 증거라기보다는 작품 속 문학적 재현이라는 점에서 해석상의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소설 텍스트를 통해 식민지 권력이 재판과 기록을 어떻게 구성하고 상상했는지를 살펴보는 데 의의를 둔다.

작품 속 서사는 1919년 3.1운동과 그 이후의 재판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민족적 저항의 맥락 속에서 재현된다(윤소영, 2020: 447). 『柳寬順物語(유관순이야기)』에서 유관순의 발언과 감정, 그리고 죽음 이후의 존재는 제도적 기록 속에서 축소되거나 삭제된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재현은 한 개인의 지움이라기보다, 민족적 기억 자체가 통제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문학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은 동시에 이러한 기억의 삭제가 완결된 형태로 유지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기록되지 않은 진실은 문학적 서사와 구술, 공동체적 기억을 통해 지속적으로 복원되며, 이는 식민 권력이 구축한 침묵의 구조에 대한 저항으로 기능한다. 작품 속 유관순의 삶과 죽음은 공식 기록의 범주 밖에서 다시 호출되며, 기억과 감정, 윤리적 상상력 속에서 재구성된다. 따라서 그녀의 서사는 역사적 사실의 직접적 재현이라기보다, 삭제된 기억이 문학적으로 되살아나는 방식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柳寬順物語(유관순이야기)』를 통해 제기되는

기억과 기록의 문제를 바탕으로, 역사 서술의 본질이 단순한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선택과 배제의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억은 단순한 감정적 회상이 아니라 역사 서술을 비판적으로 교정하는 윤리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문학과 구술은 이러한 기억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로 작동한다.

결국 본 연구가 분석한 바와 같이, 역사 기록은 본질적으로 정치성을 내포하며 그 빈칸과 삭제는 권력 관계의 흔적이다. 따라서 역사 서술의 과제는 단순한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문학적 텍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기억 형식을 통해 배제된 목소리를 재구성하는 데 있다. 이는 『유관순 이야기』라는 소설 텍스트를 통해 드러나는 기억의 윤리적 요청이기도 하다. 결국 역사란 단순히 기록의 축적이 아니라, 망각된 목소리를 다시 불러내고 사라진 이름을 재구성하는 지속적인 해석의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문학은 중요한 인식의 장을 제공한다.

역사 기록은 과거를 정리하는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권력이 선택하고 조직한 서사의 집합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기록 통제는 단순한 문서 행정의 차원이 아니라, 피지배자의 기억을 지우고 제국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전략이었다. 일본 제국은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지배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진실을 철저히 배제하였다. 본 소설 ‘柳寬順物語(유관순이야기)’의 소설을 통해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재판과정을 문학작품 속의 텍스트를 통해 역사의 기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물론 본문속의 재판과정은 사실의 ‘근거’가 아닌 작품 속 ‘문구’라는 점에서 역사적 사료로 사용하기에는 학술적 한계라 할 수 있다. 물론 당시 언론에 대한 통제 등은 관련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재판과정에 대한 ‘삭제’ 등은 그 사료를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문학작품을 통해 당시의 재판과정을 기억해 보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하였다.

1919년 일제에게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사건인 3.1운동이었다. 3.1운동은 독립선언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仗)하고 이천만 민중의 성충(成忠)을 합향려 일으킨 운동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전폭적인 참여로 이루어 졌다(윤소영, 2020: 447) 유관순의 경우, 법정에서의 발언은 조작되었고, 감정은 제거되었으며, 죽음 이후의 존재는 공식 문서에서 아예 사라졌다. 이는 한 사람의 삭제가 아니라, 민족 기억의 뿌리를 잘라내려는 기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의 지움은 실패로 끝났다. 기록되지 않은 진실은 문학, 구술, 공동체의 기억을 통해 끊임없이 회복되었고, 이는 식민 권력이 의도한 침묵의 정치학에 저항하는 힘이 되었다. 문학은 억압된 감정을 재현했고, 구술은 억눌린 진실을 말했으며, 공동체 기억은 침묵을 되돌리는 윤리적 실천을 감당했다. 유관순의 삶과 죽음은 제도적 기록에서는 삭제되었으나, 감정과 기억, 그리고 공동의 윤리 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녀는 기록을 넘어 끝내 말한 인물이며, 그 외침은 여전히 우리의 역사 속에 맥동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의 기록이 곧 진실이라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¹⁵⁾. 역사 기록은 늘 정치적이며, 그 빈칸과 삭제는 권력의 흔적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순한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침묵 속에 묻힌 목소리를 복원하고, 사라진 기억의 자리를 되찾는 새로운 역사 쓰기이다. 이는 과거의 복원이자, 현재의 윤리이며, 미래의 방향을

15) 과거와 현재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간과하고 양자를 정서적으로 동일시하는 기억은 오류와 오용의 가능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기억에 대한 역사의 견제와 비판은 당연한 것이다. 국가가 강요하는 공식적 역사 이데올로기에 비판적으로 맞설 수 있는 '기억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상기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역사 만들기'이고 '기억 읽기'인 것이다(이강화 · 김광수, 역사에서 기억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2018, vol.8, no.4, 통권 42호, 941쪽.

묻는 질문이다. 누구의 기록이 보존되고, 누구의 말이 삭제되었는가?
누구의 기억이 교과서에 실리고, 누구의 이름이 사라졌는가?

이 논문은 그 하나의 실천으로서, 침묵을 읽고 삭제된 기억을 발굴하는
작업이야말로 우리 시대 역사학의 윤리적 요청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역사란 사실을 배열하는 기술이 아니라, 망각된 기억을 되살리고 사라진
이름을 다시 불러내는 윤리적 실천이다. 지워진 목소리를 복원하고,
억눌린 기억을 다시 말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쓰는 ‘역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록이 아니라, 기억이 역사를 완성시킨다.

참고문헌

- 고혜령(2019), 『유관순 햇볼되어 타오르다』, 초이스북.
- 국사편찬위원회(2002),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신편 한국사 47』.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nh/view.do?levelId=nh_051_030_0030_0050&utm_source=chatgpt.com(2026. 4. 2. 최종접속)
- 김기창(2003), 「유관순 전기문(집)의 분석과 새로운 전기문 구상」, 한국국어교육학회, 『새국어교육』, vol.66, 295-347.
- 김기창(2012), 교과서에 수록 된 유관순 전기문, 『유관순연구』 제17호
- 김선영(2023), 『일제에 의한 조선 도서 및 기록류 관리체계의 재편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柳大河(2006), 『柳寬順物語』, 新幹社.
- 문한별(2022), 「일제강점기 제국 일본에서의 조선인 관련 출판 검열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17-248
- 민병찬(2012), 「조선총독부관부의 ‘조선역문’에 대하여」,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93호, 31-41.
- 박성진·이승일(2007), 『조선총독부 공문서; 일제시기 기록관리와 식민지배』, 역사비평사.
- 신용하(1990), 『3.1운동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윤소영(2020), 「일본신문에 나타난 3·1운동과 손병희론」, 『3·1운동과 국제사회』,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447-496.
- 이강화·김광수(2018), 「역사에서 기억으로」,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4), 통권 42호, 935-942.
- 이경용(2021), “A discourse on The Japanese Empire’s destruction of official

records: Focusing on the persistence of the records of Government-General of Chosen hel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7, 205-236.

이명화(2007), 「조선총독부 학무국 운영과 식민지교육의 성격」, 서울역사편찬원, 『서울과 역사』, 69, 145~207.

이민주(2018), 「일제 검열에 대한 조선어 민간신문의 대응양상 연구」,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62(1), 69-97.

이범오 · 성진기(2024), 「일제강점기 일본경찰 고문에 대한 연구」,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유관순연구』, 29(1).

이완규(2003),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문제의 올바른 방향: 수사권독립론과 연관된 주장과 관련하여」, 『형사정책 연구소식』, 75, 2-9.

이재진 · 이민주(2006), 「1920년대 일제 ‘문화정치’ 시기의 법치적 언론통제의 폭압적 성격에 대한 재조명」, 『한국언론학보』 50(1), 221-252.

임명순(2024), 「광복 후 유관순 열사의 부활」,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유관순연구』, 29(2).

전병무(2022), 「1910년대 사형 순국한 의병 연구: 「조선총독부관보」 ‘사형집행’조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57), 139-175.

정근식(2005), 일제하 검열기구와 검열관의 변모, 『대동문화연구』, 51(3), 41-72.

채백(2007),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 연구」, 『한국언론정보 학보』, 39, 7-39.

천안시(2023), 『유관순, 불멸의 초상』, 천안시 사적관리소.

Edward Said(1995),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역, 교보문고.

Michel de Certeau(2000), 『역사의 글쓰기』, 김남시 역, 새물결.

Shin Gi-wook & Moon Rennie(2019), 「1919 in Korea: National Resistance and Contending Legacie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78(2), May 2019, 399-408

Record Control and Modes of Representation in Yu Gwan-sun Monogatari

Jong-Sun Park*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mechanisms of record control and historical distortio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through an analysis of Yu Gwan-sun Monogatari (柳寬順物語), a Japanese-language novel written by the Zainichi Korean author Yu Da-ha. Focusing on the symbolic phrase, “Clerk, delete that part,” depicted in the trial scenes of the novel, the study examines how colonial power manipulated records and shaped historical narratives within administrative and judicial institutions.

Rather than attempting to verify historical facts empirically, this study approaches the novel as a literary representation of colonial authority and the politics of memory. To contextualize the narrative, relevant historical literature and records concerning colonial administrative practices and the trials of Yu Gwan-sun and Pak Yeol are consulted as supplementary sources. Through textual analysis, the study investigates how the novel portrays the exclusion and suppression of voices that challenged colonial rule.

The findings suggest that colonial authorities controlled collective memory by selectively recording, omitting, or altering information. In the novel, deletion functions not merely as a bureaucratic act but as a symbolic mechanism through which power intervenes in the construction of history and public memory.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rds, memory, and power, this study demonstrates how literary narratives can contribute to recovering voices marginalized or erased from official historical accounts.

Keyword: Colonial Record Control, Yu Gwan-sun, Independence Movement, Memory and Transmission, Yu Da-ha

* Director of Center for Yu Gwan-sun Studies in Baekseok Univ.(E-mail: sun4271@naver.com)